

【붙임 2】 한국노동연구원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영역

1

한국노동연구원 설립목적

노동관계諸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일반의 인식제고에 이바지하게 함

2

주요 기능

- 노동관계 제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
- 노동관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발간, 보급
- 노동관계에 관한 다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 노동관계에 관한 교육, 연수 및 홍보
- 상기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경영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비전【미션】

사람 · 일 · 행복: 앞장서는 글로벌 정책연구기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일을 통한 국민행복 구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는 글로벌 정책연구기관]

경영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경영목표1]
고용·노동정책의
학문적·정책적 선도

- 1) 정책연구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
- 2) 국제적 연구 협력 및 인적교류의 확대

[경영목표2]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서비스 제공

- 1) 국가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2) 고객중심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경영목표3]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터 조성

- 1) 인적·물적 자원과 조직 역량의 강화
- 2) 공정 투명한 경영과 생산적 노사관계 확립

☐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 노동시장 분석
- 인력수급 연구
-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 연구
- 근로시간 연구
- 임금직무 연구
- 지역노동시장 연구
- 비정규직 연구

☐ 노사관계/인적자원관리

- 노사관계체제 및 비교 노사관계 연구
- 공공부문 노사관계 연구
- 노동조합 및 경영자단체 연구
- 산업별, 업종별 고용관계 연구
- 인적자원관리 및 작업조직 연구
- 인적자원개발(HRD) 및 직업능력개발 연구
- 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노동시장 연구
- 고용평등 연구

☐ 노동법 연구☐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 고용보험 및 노동시장 인프라 연구
-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 연구
- 노동복지·차별·빈곤 연구

□ 청년 고용 문제와 장년층 고용안정 및 노동수요 확대

- 청년 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대학 차원에서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의 실태는 개선의 기미 없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 경기악화에 따른 실업증가와 고용의 질 악화는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층에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음.
- 고령화로 인해 길어진 노후를 대비할 만큼 충분한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장년층은 50대 초반에 이미 주 직장에서는 은퇴하고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거나 생계형 자영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장년층의 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하고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달성 가능

□ 경제·사회적 편익제고를 위한 외국인력정책 방향 모색

- 우리나라 외국인력 활용정책은 인력부족에 근거한 외국인력 도입확대 논의가 중심이 되어 왔으며,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향후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할 때 외국인력 규모는 증가할 전망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한국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력정책 및 이민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재정립 필요

□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근로자 보호 대책 수립

- 구조조정 관련 근로자 보호 대책은 선진 산업국가들에서도 중요한 정책 영역임. 우리나라는 산업별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상황으로 근로자 개인과 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모색이 시급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모색

-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근로시간 관련 정책과제검토와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필요

□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 연구

-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기술혁명이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진보와 고용의 관계 및 대처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기술혁신으로 인한 노동이동성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모색 시급

□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고용정책의 방향 모색

-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구조 고령화에 대응한 국가 고용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경제 전체 차원의 논의에 비해 지역경제 관점의 고용정책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지역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 대전환기,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상

- ‘사회적 대화’는 향후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적 경제사회 발전모델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핵심 기제 중 하나임. 한국의 경제사회적 대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서 사회적 대화 체제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기존의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대안 모색 필요

□ 단체교섭 프레임 개편 방안 모색

-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층위의 단체교섭이 필요에 따라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법제도적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자율적인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당면한 저성장 체제와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노사관계 차원의 해법 모색

□ 근로자대표 제도의 개편방향 연구

- 왜 근로자대표가 필요한지, 현재 근로자대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검토, 향후 근로자대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및 임금 공정성 확립 방안 모색

- 최근 노동시장 환경이 불안정하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인사관리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인사관리 방식에 대한 필요성 증대, 새로운 인사관리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이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 수준에서 기업 간과 기업내에서 공정성 확보가 필요
-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성과주의 보상체계 보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립하는게 급선무이며, 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인 구조를 없애기 위해 노동시장 횡단면적인 직무나 직종별 표준임금 작동이 필요

□ 사내하도급 문제점과 정책대안 모색

- 고용관계의 다양성과 비정규노동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두 반영하는 대표적인 유형인 사내하도급에 대한 증가 원인 및 차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소득 불평등 현황과 대책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최상위 10% 소득 집단의 소득 비중은 1999년 32.9%에서 2015년 48.5%로 확대
- 2010년대 최상위 10% 소득 비중은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영미권 나라에서는 최상위 1% 집단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한국에서는 하위 소득집단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3.4%로 OECD 평균인 85%에 한참 미달,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이 단순히 여성의 인적자본 결핍의 문제가 아닌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가족돌봄 책임에 기인한다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야 함.

□ 최저임금제도와 자영업 문제

- 2013년 알바연대가 출범과 동시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고 이후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지속 제기
-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이 큰 계층은 영세자영업자로 인건비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조치 마련 시급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 고용보험 적용률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여러 한계를 안고 있음. 제도적 측면에서 임금근로자 가운데 가사근로자 및 농림어업의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가 적용범위에서 배제되고, 특수업무근로종사자도 제외되는 상황에서 실제 적용에 있어 누락된 집단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는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

사업 등 고용보험제도의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업급여와 달리 다른 사업들의 경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고용서비스이거나 사회의 재생산과 관련된 급여로서 보편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큼.

□ 산업안전과 건강

- 산업재해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사망만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한국 사회에서 근로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산업재해의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 직장和社会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